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해외 진출 지원

김윤덕 국토부장관,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 추진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이하 K-City 네트워크)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 도시에서 자사 기술을 직접 실증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검증해 실제 수요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City Network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서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과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



김윤덕 국토부장관

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솔루션 해외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을 공모하고, 총 9건 내외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하며 연중 상시공모한다.

20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은 선정위원회(1월 21일)에서 2026년 접수된 사업 중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Alatau)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Lublin)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건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검증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제공모를 거쳐 총 6건 이내를 선정해 건당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 유형별 공모 일정은 보면 계획수립형은 연중 상시로 제안서를 접수하며 연선된 사업에 대해 올해 사전컨

설팅을 수행해 2027년 1월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은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연내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dit.go.kr)과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K-City 네트워크 누리집(www.kcitynetwork.go.kr)을 통해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 장관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은 해외 도시와 함께 스마트 도시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며 “올해는 AI 융합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적용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수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도내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청년·주거 정책 보완 계기로”

민주 이원택 의원 “공공형 청년주거 확충 검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은 최근 논란이 된 지역 대학의 기숙사 부족



이원택 의원

문제는 지역의 책임으로 학생과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북대학교 기숙사 배정 문제로 학생들의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공부해야 할 캠퍼스에서 하루하루 주거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전북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유학생 유치도 분명 필요지만 국제

화라는 이름으로 내국인 재학생의 주거권과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고 질타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과 지역, 정부가 함께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인 주거 인프라 부족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대학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청년 정책과 주거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숙사 잔여 물량의 투명한 재배분,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전주시·전북대가 함께하는 공공형 청년주거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국인인든 외국인인든 지역 학생과 청년은 전북의 소중한 자원으로, 이들이 전북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광역지자체 통합 전북 역차별 우려”

도의회 기획행정위

울 상반기 업무보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7일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대변인,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정부가 광역지자체 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전남·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전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 의원은 2026년 하계 올림픽 전주 유치와 관련하여 적정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에 발맞춰 도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질의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과 관련한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과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도내로 유치하고자 했으나 결국 타 지역으로 이전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도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마련하고 도의화와 긴밀히 소통·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 회의실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추모공간.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공>

민주 도당, 이해찬 상임고문 추모공간 마련

31일까지 도민 누구나 조문 가능... 28일 지역 정치권 합동 추모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7일 오전, 도당 당사 회의실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의 정치적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기리기 위해 이번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추모공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조문 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 가능하며, 첫날인 27일은 정오 12시부터 운영된다.

장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으로 당원은 물론 일반 도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고인의 명복

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북도당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하신 이해찬 상임고문의 뜻을 이어받아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은 28일 오전 10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식을 열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도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자임추모공원 사태, 행정 무능이 만든 사례”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가 장기화되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전북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7일 논평을 통해 “타 지역은 유사한 추모공원 분영을 조기에 해결했지만 전북만 해결하지 못해 전국 유일의 행정 실패 사례로 남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무허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한 행정 당국의 ‘죄무유기이자 행정 참사’로 규정했다. 특히 장사법상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추모시설을 점유하며 유가족 출입을 막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이 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이어진 행정 책임자들과의 면담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며 “더 이상 검토가 아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순창군 탁상행정, 국민주권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훼손”

오은미 도의원, 개선 촉구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진보당, 순창)이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이 농식품부 지침을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위장 전입자 색출에 나서며 등 탁상행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에 밀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통화 발신 내역 조회 동의를 요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순창군은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도의원

또한 순창군이 마을운영위원회 등 중심으로 위장 전입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으로 순창군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남 만큼, 신규 전입자에 대한 포용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 기준에 대해서도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교육 문제로 평일 거주가 어려운 주민과 대학생까지 배제하는 현행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아동수당·농민수당·청년중직장장 지원금 등 3대 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려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장수군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 군민에게 지역생환상품권 1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이 시범지역 선정 후 1천여 명의 군민이 증가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관심 받고 있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증빙 통신기 발신 내역서 등에서 하나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순창=이양원 기자

6월 7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햇빛 연금 등으로 임실 100년 설계”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7~8대 전북도의회이자 햇빛 연금 상임대표가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 임실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군수를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임실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묻는 선거”라며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상임대표를 지도했던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원한식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김진명 전 도의원 임실군수 출마 공식화

그룹 10여명이 함께 지리했다. 김 상임대표는 “관리하는 군수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군수가 필요하다”며 “임실의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임실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수”를 슬로건으로 네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햇빛 연금을 통한 군민 평생 소득 창출, 피지컬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농촌주민 수당의 즉각 시행, 읍과 면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정책 등을 내걸었다. 김진명 상임대표는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임실, 읍과 면이 상생하는 임실, 어른의 삶이 존중받는 임실을 군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길에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진안형 기본소득·기본사회”

이우규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진안군수 도전장

이우규(61)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가 27일 오전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우규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우리 진안은 지역소멸 위기의 한복판에 있으며 지역경제도 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후 위기 속에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몰라 미래 농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속에 어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 아이들의 환경도 청년들의 미래도, 장애인들의 복지도 모두가 자신들의 책임이며 홀로 자립하라고 해서 안 될 일이다”며 “지역이 군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서 공동체를 재출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지하는 유일한 길이며, 진안형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주민지체를 통한 현장 중심 군민을 섬기는 혁신행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안을 조성 등 7대 비전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기가 불리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명에 따르면과 잘라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